

勞 “NO” 첫발부터 삐걱…일자리사업 노사 상생에 힘 쏟아야

‘광주형일자리’ 자동차 공장 착공 과제

중앙정부 재정지원·제도 완화 등 뒷받침 돼야

노동 이사회 도입 등 노사 책임경영 구축해야

26일 (주)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공장 기공식을 시작으로 노사상생형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본격화됐지만 사업 성공을 위한 과제는 한 둘이 아니다. 지역 노동계와의 갈등 해결을 통한 노사 책임경영, 중앙정부의 과감한 지원이 우선 꼽힌다.

◇“노사상생없이 미래 없다”=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는 물론 중앙정부 관계자조차 노사 책임경영을 주문하고 나선 것은 노사화합, 노사 공동 희생 없이는 사업 성공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

광주형일자리에는 광주 빛그린산단에 자동차공장을 건립, 운영하면서 지역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데, 그 밑바탕에는 노사상생 정신이 깔려있다. 단순히 차를 만들어 팔자는 게 아니라 노동자 임금 평균을 대기업 노동자 임금 절반인 3500만원 수준으로 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임금(복지제공)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설정됐기 때문이다.

임금 체계, 노사 갈등 등 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현안 역시 지역 노동계가 참여한

노사민정 협의체에서 조정해 노사 분규를 최소화함으로써 사업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도록 돼 있다. 지역노동계와 광주시, 광주글로벌모터스 경영진이 함께 사업을 끌고 가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이때문이다. 시민사회에서는 “회사 설립에 시민 세금 500억원이 투입되고, 중앙정부가 각종 지원에 나서는 이유는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것이지 결코 현대차를 비롯한 투자자들의 배를 불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1대 주주인 광주시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이날 기공식 축사에서 문성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광주글로벌모터스는 노동이사제 도입을 뛰어넘는 노사상생형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결론적으로 미래 일자리는 노사상생이 되지 않으면 미래는 없다. 아무리 어렵더라도 노동계가 함께하는 광주형일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작지 않다. 이북희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도 “노사책임 경영, 상생형 일자리의 모범을 만드는데 힘을 쏟아달라”고 조언했다.

◇“중앙정부 강력한 지원 뒷받침 돼야” = 광주형일자리 자동차공장 노동자들에게 이른바 대기업의 반값 연봉 수준의 임금을 주도록 지역 노사민정이 애초 합의한 데엔 그 차액만큼의 사회적 임금이 뒷받침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다.

임금이 대기업 자동차공장 노동자 절반 수준이더라도, 주거·보육·교육 등 복지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채워준다는 일종의 사회적 합의가 있었던 것이다.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별개로, 노동자들에게 세금이 쓰이기 위해서는 관련 근거가 명확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광주형 일자리 지원 근거를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안의 통과가 시급하다. 특별법 개정안에는 광주형 일자리와 같은 ‘상생형 지역 일자리’의 개념을 정의하고 행정·재정적인 지원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소관 상임위 통과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는 시간 문제지만 예산 지원 부담을 지방정부에 과하게 지우는 것이어서 곤란하다”며 “시행령 등 관련 규정 제정시 예산 부담 비율을 정부와 지자체가 7대 3 또는 그 이상을 정부가 부담하는 방향이 되도록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과 관련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공식에서 “노사민정이 함께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근로자들과 광주청년유니온 회원 등 광주지역 노동자들이 2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삼거동 빛그린 국가산단 삼거교차로 인근에서 열린 광주글로벌모터스 자동차 공장 기공식 행사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들은 결의대회에서 노동존중 사회통합 광주형 일자리 4대역제 실행을 촉구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해야 한다. 정부도 세금 감면, 정주여건 개선에 힘쓰겠다. 노사민정이 함께 해야 한다”고 말했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양질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정부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형일자리 지원 사업은 만족할 수준은 아니지만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다. 노동자 주거 부담을 줄여주는 행복임대 주택(800세대 규모)은 대부분 공장 용지로 쓰이는 빛그린 산단에는 부지가 없어 인근 부지를 매입해 내년부터 건립에 들어

간다. 광주시는 관련 근거가 만들어지면 임대주택 보증금 이자 등을 지원할 준비를 하고 있다. 입주 기업 종사자를 위한 직장 어린이집·개방형 체육관은 내년 초 공사에 들어가 2021년 완공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5·18진상조사위 이르면 연내 출범한다

문대통령, 조사위원 임명 재가

한국당 추천 지연 1년 늦어져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 조사위원들의 임명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5·18 진상조사 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자유한국당의 위원 추천 지연 등에 따라 1년 이상 늦춰졌던 진상조사위 구성은 내년 1월 위원장 선출 등을 마치고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26일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광주일보와의 통화에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18 진상조사위원 임명을 재가했다”며 “연말 이낙연 총리가 진상조사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28일 국방부가 청와대로 조사위원 9명에 대한 개인 정보 동의서를 올린지 한 달만에 내려진 결정이다.

조사위원들은 임명장 수여 후 최초의안심사 회의에서 3명의 상임위원(안종환·송선대·이종협)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투표로 통해 선출한다. 또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칙·위원회 적제 규칙·위원회 인사 관리에 관한 규칙·위원회 규칙의 공포에 관한 규칙·정부부처 파견공무원 운영계획·별정직 공무원 채용 계획 등도 의결한다.

진상조사 위원회는 1월 초 조사관 공모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완전한 진상조사위원회 출범은 2월 말경에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진상조사위가 출범을 해도 조사관과 전문위원들의 교육 기간을 고려하면 바로 진상조사에 들어 갈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5·18진상조사위는 국회의장 추천 1명과 더불어민주당(4명), 자유한국당(3명), 바른미래당(1명)이 추천한 9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한국당은 군 출신의 보수성향 인물을 염두에 두고 있지만 적합한 인물이 없다는 이유로 위원 추천을 미뤘었다. 한국당이 당초 추천했던 권태오 전 육군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법적 자격 미달로 지난 2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이후 지난 10월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 발의한 조사위원 자격 요건에 ‘군인으

로 20년 이상 복무한 사람’을 추가한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당은 2명을 재추천했다. 문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한 2명 중 권태오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작전처장을 이종협씨로 바꿨으며, 이동욱 후보에 대해서는 자격요건을 보완해 재 추천한 것이다.

이로써 5·18진상조사위 조사위원은 안종협 전 국가인권위원회 기획조정관(국회의장 추천), 이종협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차기환 전 수원지법 판사,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 (이상 자유한국당), 송선대 전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민병로 전남대 교수, 서예원 변호사, 이성준 송원대 교수(이상 더불어민주당), 오승용 전남대 5·18연구소 연구교수(바른미래당) 등이다.

5·18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최경환 의원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진상조사위 출범으로 5월의 진실이 낱알이 밝혀지기를 기대한다”며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관심과 성원”이라고 말했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북 비핵화 실천시 국제사회도 상응하는 모습 보여야”

문 대통령 “3차 북미회담은 한반도 평화 가장 중요한 고비”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더 많은 행동이 필요하다”며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비핵화를 실천해 나간다면 국제사회도 이에 상응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기고 전문 매체인 ‘프로젝트 신디케이트’에 ‘무수한 행동들이 만들어내는 평화-한반도 평화구상’이라는 제목의 기고를 통해 “북미는 서로 상대가 먼저 행동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다행인 것은 북미 정상간의 신뢰가 여전히 대화로 이어가고자 하는 의지도 변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며 “행동에 행동으로 화답해야 하고, 국제사회가 함께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 교착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북미 간 동시적인 ‘행동 대 행동’의 원칙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북미가 조속히 대화를 재개해 상호 신뢰 하에 쌍방 조치를 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평화는 혼자 이룰 수 없으며 평가가 아무리 절실하다고 해도 한국이 마음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며 “평화를 함께 만들어갈 상대와 국제질서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북미 실무협상과 3차 북미정상회담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전체 과정에서 가장 중대한 고비가 될 것”이라며 “그 어느 때보다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동행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비무장지대(DMZ)의 국제평화지대화’ 제안을 거론하며 “북한의 안전을 제도와 현실로 보장하고 동시에 한국도 항구적인 평화를 얻게 될 것”이라면서 “실질적인 평화체제가 이뤄지고 국제사회 지지 속에서 한

반도 비핵화를 이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한국이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남북 사이 끊긴 철길·도로를 잇는 일은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선도하는, 교량 국가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한반도는 ‘평화 만들기’가 한창으로, 눈에 보이는 이벤트가 없더라도 수면 아래에서 도도하게 흐른다”며 “공동경비구역(JSA)에는 권총 한 자루 남겨놓지 않았고 비무장지대(DMZ) 초소를 철수하면서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고 있다. 평화는 조금씩 앞으로 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동욱 선임기자 tuim@kwangju.co.kr

인터넷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ONE-STOP 창업지원센터

친환경양식 기술이전교육
ONE-STOP 창업지원 컨설팅
친환경 양식업체 모니터링 지원
양식장 심화교육
기술교류 워크숍

해양수산부의 지원으로 2017~2019년까지 3년간 시범사업으로 진행된 ‘친환경양식 기술이전 ONE-STOP 창업지원 사업’을 통해 53명(20%)이 양식장 창업에 성공하였습니다.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합계	
	교육수료자수	창업자수	교육수료자수	창업자수	교육수료자수	창업자수	교육수료자수	창업자수
흰다리새우	58	3	47	9	52	9	157	21
큰장거미새우	35	10	42	12	27	10	104	32

양식창업 5대 고민!! 해양수산부가 해결해드립니다!!

- 1** 청년인데, 창업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블루오션, 바다 및 내수면에서 창업하세요. 건강한 먹을거리를 생산·유통·가공하여 꾸준한 수익 창출이 가능합니다.
- 2** 배우는 비용이 적정합니다.
배우는 데 들어가는 비용의 대부분을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합니다.
- 3** 귀어·귀촌해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이미 귀어·귀촌해 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들에게 생생한 경험담을 듣고 면밀하게 준비할 수 있습니다.

- 4** 넷, 창업해서 잘 될지 자신이 없습니다.
창업자간 네트워크를 구성, 사후 컨설팅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 5** 다섯, 연고도 없고, 기술도 모릅니다.
해양수산 각 분야 전문가들과 선배 어민이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교육기관과 현장에서 직접 보고, 실습하면서 기술은 물론 노하우까지 전수받을 수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FIPA 한국어촌어항공단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ublic Agency



경남어촌특화지원센터



전남어촌특화지원센터